

월급 받아 놓고 먹는 지방의원들

유능한 전문인력의 참여를 독려하고 책임감 있게 의정을 이끌게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의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1년 반을 조사해 어제 보도한 대차대조표를 보면 결과는 실망스럽다. 무보수 명예직 때보다 나아진 것은 없고 세금만 축낸다는 결론이다. 심지어 돈 안 받고 놀던 데서 돈 받으면서 놀게 된 것으로도 모자라 호화판 개인사무실을 요구하고 공무원 복지도 누리게 해달라고 억지를 쓰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지방행정을 감시하라고 뽑아놨더니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들여놓은 꼴이 됐다.

대구시의회의 경우를 보자. 시의원 29명은 시청사에서 2개 국을 쫓아내고 각각 초등학교 교실 3분의 1만한 크기에 32인치 TV까지 갖춘 개인사무실을 차지했다. 이들은 연봉 5100만원과 별도로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7만원씩 수당도 챙기고 해외여행 경비까지 받는다. 사무실까지 치면 한 해 의원 1인에게 1억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는 셈이

다. 그런데 1년간 이들이 발의한 조례는 10건(의원 1인당 0.32건)에 불과하다. 정책입안의 성과로 보면 다른 광역시의회도 일 안하기는 비슷하다. 회기 중에도 의정보다 유력 정치인과 악수하는 게 우선이고, 회의에 참석조차 않는 의원도 수두룩하다. 여북하면 시민단체들이 “월급을 토해내라”며 소송을 낸다고 하겠는가.

물론 유급제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 의원들이 월급값 못하는 현실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과정의 진통으로 볼 수도 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을 만큼 헌신적이고 박수 받는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과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동료의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못난 ‘꼴뚜기’ 의원들이 더이상 거들먹거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감시를 강화하고, 유권자들은 냉철해져야 한다. 월급값 못하는 지방의원은 시민단체와 유권자의 부실한 검증과 선택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